

□ 정부시책 □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보험 지원강화

조달청의 비축사업에 대한 보증시행, 심사 절차 간소화, 수출보증보험 개선 등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보험 지원강화

□ 산업자원부는 조달청의 비축물자 방출사업에 대해서도 수출보증공사가 수출신용보증을 시행하고, 3억원 이하의 소액보증시 심사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보험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주요내용

① 수출기업이 조달청의 비축물자 방출사업을 통해 원자재를 외상구매하거나,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부터 구매자금 및 유통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동 상환채무를 수출보증공사에서 보증(10월중 시행)

※ 기대효과 : 수출자의 담보능력 부족을 해소하여 유관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활성화

②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심사절차를 보증금액별로 차등화하여 3억원 이하의 소액보증의 경우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10월 초 시행)

- 소액심사(1억원 이하) :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액대로 책정
· 보증제한 사유 : 수출자가 적확색 거래처인 경우 등

- 간이심사(3억원 이하) : 수출자 신용등급 등 4개요소 평가(현행 평가요소 : 12개 항목)

③ 수출보증보험 제도개선(10. 1 시행)

- 대상거래를 확대하여 하청계약자에 대해서도 보증지원

· 국내 수출자가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하청계약자에게 보증서를 요구할 경우 수출보증공사에서 수출보증보험으로 지원

· 수출보증보험 : 금융기관이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서(입찰보증, 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를 발급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수출보증공사가 보상하는 제도. 현행 제도상 해외수입자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 수출자만 지원대상임

- 은행이 포괄보험 대상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수출보증보험 포괄보험의 대상인 해외공사 및 산업설비 수출 외에 선박 등 기타 품목을 은행이 선택토록 함(BIS 비율이 낮은 은행은 대상거래 축소, 높은 은행은 확대를 요망)
- 포괄보험 : 수출보험공사와 은행이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거래 모두를 자동적으로 부보하는 방식(포괄보험 부보시 보험요율 50% 감면)

□ 개선방안

- 조달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도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지원
 - 보증대상 확대 : (현행) 금융기관 → (확대) 금융기관 및 수출자금 지원기관
 - 운영방안 : 신용장 및 수출계약서 건별로 보증한도 책정(개별보증)
- 시행일시 : 10월중
 - 업무방법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약관 등 개정 및 해당기관과 업무약정 체결 후 즉시 시행

1.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시행

□ 현 황

- 조달청 등 정부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시행시 수혜대상인 기업들이 담보능력 부족으로 이용에 애로. 수출차질 우려
 - 수출보험공사의 현행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제도는 보증대상을 금융기관으로 한정

2. 소액금액 심사절차 간소화

□ 현 황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한도확대 및 L/C수취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전액보증 시행('98. 7. 1)으로 보증신청 급증
 - 시행이후 일평균 취급실적은 상반기 일평균 대비 518% 증가
- 처리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취급실적 (억원) >

	건 수	금 액	일평균 금액
'98 (1~6월)	284	654	4.4
'98 (7. 1~9. 22)	786	1,931	27.2

해 심사절차 간소화 필요

의 경우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

□ 개선방안

- 시행일시(조치사항) : '98. 10월초 (수출보증공사 인수요강 개정)

- 보증금액별 심사방법을 달리하여 소액보증

구 분	보증금액	심 사 방 법
소액심사	1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액 책정 - 보증제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가 G, R급인 경우 ·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중인 경우 · 채무자가 적황색 거래처인 경우
간이심사	3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요소만 평가하여 한도 책정 - 수출자 등급, 전년도 수출실적, 금융기관 연체사실 여부, 평가의견
일반심사	3억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하게 심사 - 12개 요소 평가, 총평점별 책정가능한도에 따라 책정

* 건별 평균 지원금액 ('98. 7. 1~9. 22) : 2.46억원

3. 수출보증보험 지원대상 확대

반대)

- 대상거래 : 해외건설공사·엔지니어링 계약, 일괄수주방식의 산업설비 수출계약

□ 현 황

- 현행 수출보증보험은 지원대상을 해외공사계약 및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해외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보증서로 한정
 - 외환위기 이후 수출기업의 자금경색으로 하청기업 등에 대한 보증수요 발생
- 현행 수출보증보험 포괄보험은 대상거래를 일률적으로 적용. 일부 은행은 BIS비율 부담에 따라 대상거래 확대 요망(반면, BIS비율에 여유가 있는 은행은 확대

□ 개선방안

- 하청계약자의 수출관련 보증서에 대하여도 지원가능토록 담보대상 제한 폐지
- 은행이 현행 포괄보험 대상 외에 선박 등 기타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 시행일시(조치사항) : '98. 10. 1 (수출보증보험 약관 및 포괄보험 특약 등 개정)

산업자원부, 「품질경영 기본 계획」 수립

품질경영의 장기 발전방향 제시 및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효과적인 경영개선 전략으로서 품질경영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품질경영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품질경영 체제 구축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코자 품질경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함.
- 이 계획에는 품질경영 확산의 중점 추진시책으로서 기업, 학계 및 정부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및 전문인력의 양성, 품질경영 관련 정보·기법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과 ISO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진단·지원 강화 그리고 품질경영 포상제도의 개선방안 등도 마련되었음.
- 정부는 그간 단편적인 품질경영 시책 중심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동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제품의 품질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당면과제인 수출증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는 최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경영체제 개선전략의 일환으로서 품질경영체제의 도입과 확산이 시급해짐에 따라

- 품질경영촉진법 제3조에 의거, 품질경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함.
- 특히, 정부는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그간의 단편적인 품질경영진흥시책 중심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시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그 의의를 밝혔음.
- 산업자원부는 그간 학계, 산업계 및 품질경영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고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품질경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음.
- 금번 계획에서는 그간의 정부주도적 품질관리 확산정책에서 21세기를 대비, 기업과 학계, 관련단체 및 정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의한 능동적 품질경영체제의 확립에 중점을 두었으며
-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마인드 확산을 통해 업계의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하여 우리 제품의 품질수준을 제

고함으로써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일류수준의 품질국가로 도약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음.

○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다음과 같이 품질경영 확산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① 우선 품질경영 추진조직을 체계화하여 그간의 산업계 중심의 추진조직에서 산업계, 공공부문, 학계, 관련기관 및 정부를 포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 산·학·관 추진조직별 기능의 활성화와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유도하여 품질경영체제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② 부족한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 대학 관련학과에 품질경영 교과과정의 도입과 이수 추진 등 고등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지역별·업종별 인력양성을 위한 품질혁신센터의 운영을 지원(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자금 활용)하며

- 기업내 경영자와 사원에 대한 품질경영 재교육을 개선하여 세분화·차별화 교육실시와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임.

③ 또한 품질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기법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 업계에 품질경영 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정부지

원을 추진하고 품질관련 각종 기법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④ 업계의 품질경영시스템 정착 지원을 위해

-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ISO 9000)가 정착되도록 민간자율의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인증심사의 수준과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⑤ 또한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품질경영 진단·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전문 진단기관을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격 진단·지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제가 우수한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 모기업과 도급 기업간 협력체제 구축을 유도해 나갈 예정임.

⑥ 이와 함께 정부가 품질경영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하는 품질경영상 포상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 품질경영상 평가기준을 기업경영 환경에 적합도록 개정하여 기업의 품질경영 방향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포상대상을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며 심사방법을 포상대상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포상제도를 활성화

화할 계획임.

⑦ 마지막으로 품질경영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 고객 품질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품질경영 도입을 촉진하며 품질경영 관련 각종 행사개최와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도 동시에 수립하였다고 밝혔으며

- 이를 통해 국내 품질경영체제의 확산과 인식 도모로 단기적으로는 현 경제위기 극복과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가 21세기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거래 촉진 대책 마련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내의 기술을 조사해 수요기업들에 직접 연결시켜주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창출을 위한 세포형단체'가 구성돼 연내 운영에 들어간다.

또 기술이전 등 기술거래를 주사업대상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테크노마트도 이미 발족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기술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술거래 세포형단체는 IMF 지원체제 이후 외국산 원자재, 부품 등의 가격이 높아져 국산대체가 절실한 점을 감안, 기술거래를 통해 국내생산이 가능토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중기청은 중소기업 가운데 선진국에 근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한계기술력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수입대체 또는 수출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거래 세포형단체는 기술관련 시장정보를 조사해 어떤 기술을 국내외로 부터 구매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를 업체에 체계적으로 탐색·조언하게 된다.

또 신규로 구매한 기술의 운용을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 기초기술이 부족해 기술거래를 망설이는 기업을 지원한다.

운용기술에 대한 지도 및 기술요원 알선, 신기술로 생산된 제품의 판로 조언 등도 할 예정이다.

기술거래 세포형단체는 중소기업과 관련대기업, 교수 등 전담 기술전문가와 행정위원등 4~9명으로 구성되며 중기청은 연내에 우선

10개 정도의 시범단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체는 해당 기술거래가 이뤄지면 자동적으로 해체되는데 3개월형과 6개월형 2가지로 운영된다. 중기청은 이달중 세부추진계획을 공고하고 대상기술을 신청받아 11월중 단체구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이버공간을 통해 기술이전 등 기술거래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테크노마트가 지난 2일 설립인가를 얻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법인은 국내외 기술거래와 관련한 개인, 단체와 상호협약을 체결해 기술거래 인적자원을 체계화하고 사이버시장을 통해 거래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상공회의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기옥현 등 일본의 6개 지자체,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등과 협약체결을 논의중이다.

한국테크노마트는 전 포항제철 부설 기술연구소 김철우 소장과 충남대 등 현직 공과대학교수들을 발기인으로 출범하는데 전담기술관련 전문가를 매개로 기술거래를 하게 된다.

중기청, 'Y2K' 문제 방문 해결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해 Y2K(일명 밀레니엄버그, 컴퓨터가 2천년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Y2K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자금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해온 중소기업들의 Y2K 문제해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그동안 중소기업들로 부터 신청을 받아 Y2K 문제해결에 나서던 것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전문가를 전국 175개 산업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파견해 사전 점검

을 실시한 다음 점검결과에 따라 전문가들이 1~2개월간 장기 순회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다.

또 사업초기에는 지원업무의 범위를 Y2K 해결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희망기업에 대해 인터넷 교육, SW개발 등도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도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716개)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Y2K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구조개선사업자금, 기술혁신개발자금 등 각종 정책

자금을 지원할 때 Y2K 해결 여부를 반영하 있다.

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과 협조해 Y2K 문제해결 여부를 여신평가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Y2K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관찰 지방중기청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중기청은 올해 68억원의 예산으로 Y2K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163억원으로 대폭 늘려 5천여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